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내실화 ‘소걸음’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초 DB 부실로 내년 1월 조정
이용료 감면 또 검토… 잦은 손질로 신뢰 하락 차조
교통량 감축 계획 신청도 저조… 도 “심도있게 논의”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행력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 관련 임대료 감면이 재추진되는 등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6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 등을 담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3년에 걸쳐 유료로 전환해 공영주차장 사유화와 주차회전을 저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12월 1일 시행에 맞춰 17일(오늘)부터 예고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주소 및 주차면 정보 등 기초적인 DB 조정이 늦어지면서 예고기간이 30일로 미뤄지고 시행일도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한 내년 1월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면 유료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주차관제시설 등의 설치 예산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6개월 이내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6일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1090곳) 중 유

료로 전환된 주차장은 44곳(4%)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의 제도 보완도 재추진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이용요금은 당초 동 120만원, 읍·면 90만원에서 현행 동 97만5000원, 읍·면 74만1000원으로 한차례 조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연내 사회초년

생,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감면을 추진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또 검토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본격 이뤄진 후에도 잦은 제도 손질로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신청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다. 제주도가 지난달 10일 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총 192곳(제주시 117곳·서귀포시 75곳)이 신청됐다. 이는 전체 부과대상 건물(2882곳)의 7% 수준이다.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힘들다. 선언적 의미로, 점진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조정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제주국제공항과 메종글래드호텔, 롯데시티호텔, 라마다프라자호텔 등 대규모 사업장 참여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계절의 초입, 역새꽃들의 군무 창문을 넘나드는 바람에 선선함이 가득하다. 제주 들녘에서는 벌써부터 역새들의 군무가 시작되고 있다. 16일 제주 새별오름에는 가을을 알리는 역새꽃이 피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한껏 선사해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공기관 1년간 경영 ‘별반 무성과’

2018 경영·기관장 평가 결과
신보재단·통상진흥원 상위권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의 지난 1년간 경영은 부진의 늪에 빠지지 않았지만 특출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16일 발표했다.

우선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공사 평가 결과 모두 ‘나’ 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해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도(2018년 실적) 270개 기관 대상 지방공기업 기관평가에서도 제주에너지공사는 ‘나’ 등급,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는 ‘다’ 등급을 받았다.

13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신용보증재단이 1위를, 경제통상진흥원, 국제컨벤션센터,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한의약연구원 9개 기관이 ‘나’ 등급, 제주의료원이 ‘다’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및 출

장 평가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경제통상진흥원, 국제컨벤션센터,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한의약연구원 9개 기관이 ‘나’ 등급, 제주의료원이 ‘다’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기본연봉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기관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은 40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조상훈기자

‘제주형 사회적농업’ 내년부터 추진

도, 사회적농장 4곳 지정 계획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농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농촌생활 적응,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81번째 과제 세부내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으로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TF팀(15명)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7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은 수요

자 중심으로 선택과 이용 가능한 맞춤형인 돌봄형과, 돌봄+교육형 2개 유형으로 개발됐다.

도는 앞으로 유형별로 사회적 농장을 공모·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하는 돌봄형은 복지기관 또는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 등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돌봄+교육형은 사회적 농업 관련조직, 교육농장 등 기존 농장을 권역별 특화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우선 내년에 돌봄형, 돌봄+교육형의 사회적 농장 4개소를 공모·지정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1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일몰’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오등봉·중부공원 적용 검토
도·도의회, 오늘 정책토론회
“재정부담 감소”vs“민간특혜”

2021년 8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민간특례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의회가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추진 대상은 오등봉공원(제주시 오등동·76만㎡)과 중부공원(건입동·21만㎡)이다.

이들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는 동부공원(화북2동~도련1동·32만㎡)이 선정됐으며, 현재 지구 지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도는 탈락한 2곳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과다한 매입비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곳에 대해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 계획보다 315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민간특례개발이 추진되면 최소 202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특히 일몰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간 특혜 가능성 등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올 바른 지식, 깨끗한 미래

태양광 발전 바로알기

태양광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태양광 발전 창업스쿨 참여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19. 9. 27(금) 14:00 ~ 17:30
장소 메종 글래드 호텔 1F 삼다정홀
인원 50명 (선착순 마감)

* 사전신청 없이 현장방문하시는 분들은 교육책자 배부 불가

교육비 무료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사례, 농가태양광 지원 정부정책 등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에 유선으로 신청 (☎ 064-748-4695)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태양광 바로알기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대응 방안

우리집에 태양광을 공짜로 설치해 준다던데 진짜인가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연령층 대상으로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다는

허위 광고 사례

정정보조금 사업에도 소비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 ✓ **확인**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064-748-4695)
- ✓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접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 업체가 정부사업을 하는 업체가 맞나요?

무자격업체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